



광복절과 남북통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올해 8월 15일은 제78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절은 국경일로 공휴일이지만 이날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려 주고 국가관을 심어 주는 국가관 교육의 날로 뜻 깊게 보내야 한다.

우리는 건국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못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탄압과 억압 속에서 굶주리며 사는 우리 동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시작된 신생 정부가 120여 나라에 이르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지식 정보 사회까지 이루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남은 과제는 선진한국을 이루는 일과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해야 하며, 국민이 국가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이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분단의 원흉이고 침략자인 일본은 아직도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사 반성은 하지 않고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한국 공산품의 생산을 중단 시키려고 경제 전쟁을 일으켜 생산 공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교과서에 왜곡하여 지도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변할 줄 모르는 일본의 침략야욕과 일제의 악랄한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국가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면서 우리나라는 독립하게 된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이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체형장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안내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과거사를 탐색해 보게 해야 할 것이

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어떠한 만행을 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독립기념관이다. 국가관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2천 년을 국가 없이 떠돌아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식을 지켜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에서 국가관 교육이었다.

독립기념관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독립투사들에게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며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피를 흘리며 일제와 투쟁했다. 기념관에 전시된 독립투사들이 간직했던 피 묻은 태극기는 보는 사람들을 숙연케 하고 있다. 광복절 아침에 국기를 자녀와 같이 게양하면서 제1차로 국가관 교육을 국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국기와 국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592년~1598년까지 7년 동안 임진왜란의 침략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고, 1910년 8월 29일 국권피탈로 우리나라를 빼앗아 36년간 식민 통치를 하면서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처녀들을 잔쟁터로 끌어다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시켰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을 징병 징용으로 끌어다 희생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위한 꾸준한 투쟁을 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 공산당의 반대로 남북한 통일을 못하고 남한만이 1948년 5·10선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남북이 통일을 못하고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으며 지금도 통일을 못하고, 정전이 아닌 휴전을 하여 휴전선 155마일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이산의 아픔을 안고 있다.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에서 벗어나 제2의 자주독립 광복의 날인 남북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조국 한반도에서 조상이 같은 한 민족이라는 국가관을 정립하고 침략자 주변 세력을 물리치고 독립과 배트남처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엔 최초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고

유도현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사



행
□ 불법 주차차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선택 ->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확인
□ 최초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제출
예외)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그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 실행

라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신고도 좋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 일이 당연시 되게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길 바란다.

집집마다 작은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자

기고

고영길 여수소방서 화확119구조대 소방사



지난 2022년 한 해 전남소방은 33,342건의 화재 신고를 받고 2,925건의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공장 등 비주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01건으로 27.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거시설에서 533건(18.2%), 임야에서 401건(13.7%), 차량(302건), 선박(41건), 쓰레기 등 기타 화재(844건)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주거시설의 화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불이 나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시설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주방과 방마다 설치되어 수면 중인 거주민에게 화재 발생을 경보하여 알리고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관리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에선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잘 보이지 않는 현관 신발장 등에 방치되거나, 내용연한인 10년이 경과 되어 부식이 발생하고, 용기 내부 압력 저하나 소화약제가 굳어버려서 제대로 된 작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배터리로 작동하기에, 주기적으로 동작 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방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여수소방서는 올해(2023년) 주민센터를 통해 선정된 화재 사고 안전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는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거시설 모든 곳을 소방서가 들어다볼 수 없기에 국민 스스로 내 집, 내 주거시설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들여다보고, 사용법을 익히고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겠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견된 침해보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였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